

北 김정은 “비핵화는 선대 유훈”

북·중 정상회담서

북한 노동당 김정은 위원장이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 추진 의지를 밝혔다.

28일 중국 정부는 관영 신화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으며,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북중 정상회담에서 위와같이 밝혔다고 발표했다.

시 주석은 이 자리에서 중국공산당 지도부를 대표해 김 위원장의 첫 중국 방문에 환영을 표명하면서 “이번 방문은 시기적으로 특별하고 의미가 중대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방문은 위원장 동지(김정은)와 노동당 지도부가 양국, 양당의 관계를 고도로 중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며 “우리는 이를 높게 평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위원장은 “최근들어 중국에는 큰 일, 좋은 일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면서 “작년에 19차 당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고, 얼마 전에는 양화(兩會)를 열었다”고 회담했다. 그러면서 “시 주석은 전 당, 전 국민의 사랑과 지지를 받으면서 지도부의 핵심이 됐고,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으로 다시 선출됐다”며 “북중우호 관계 전통에 따라 나는 당연히 중국을 방문해 대면하고 축하인사를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또 “현재 한반도 정세는 급속도로 발전하고, 많은 중요한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다”면서 “감정적으로나 도의적으로나 나는 시 주석과 대면해 상황을 전달해야 했다”고 강조했다.

시 주석은 “북중 간의 전통적 우의는 양국, 양당의 오랜 선배 지도자들이 직접 만들고 이뤄낸 것이며 양국의 소중한 재산”이라면서 “우리의 오랜 선배 지도자들은 공동의 이상과 이념, 혁명적 우정을 갖고 상호 신뢰하고 지원했다”고 밝혔다. 또 “북중의 몇 세대 지도자들은 시종일관 긴밀한 교류를 유지해 왔고, 친지처럼 자주 왕래했다”면서 “양국, 양당은 서로 지지하고 협력하면서 사회주의 사업의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했다”고 역설했다.

시 주석은 양국 관계를 위해 4가지 제안을 했다. 이를 제안은 ▲고위급 교류의 지도적 역할을 발휘한다. 새로운 정세 하에 두 정상은 상호 방문, 특사 파견, 서신 등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는 양당의 전통을 이어간다. 중대한 사안을 둘러싸고 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왼쪽)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25~28일 중국을 비공식 방문했다. 양측은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회담했다. 시 주석은 회담 전 김 위원장을 위한 환영식도 개최했다. 신화통신은 28일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을 공식 보도하면서 이 사진을 공개했다.

“한반도 정세 급속 발전 시진핑에 직접 전달해야”

시진핑, 양국관계 위한 4가지 제안 내놓기도

주 의견을 교환해야 한다 ▲평화발전 프로세스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북중 우호관계 강화의 민의 기반을 다진다. 다양한 형식의 민간 교류를 강화하고 양국 젊은 세대가 북중 우의 전통을 이어나가게 한다 등

이다. 시 주석은 “올 들어 한반도 정세에는 긍정적인 변화가 일어났다”면서 “북중의 중대한 노력에 우리는 찬사를 보낸다”고 말했다. 이어 “한반도 문제에 대해 우리는 비핵화 실현, 한반도 평화와 안정 수호,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의 원칙을 지키고 있다”며 “우리는 관련국들이 남북 관계 개선 시도를 지지하고 대화 재개를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해 줄 것을 촉구했다”고 언급했다.

이에 김 위원장은 “현재 한반도 정세는 좋은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주동적으로 긴장 완화

조치를 취했고 평화 대화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김일성 주석과 김정일 총서기(위원장)의 유훈에 따라 한반도 비핵화 실현은 우리의 시종일관 변하지 않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우리는 남북 관계를 협력의 관계로 변화시키기 위해 남북 회담을 개최하기로 했고, 미국과의 대화를 위해 북미 정상회담을 갖기로 했다”면서 “만약 한국과 미국이 선의를 갖고 우리의 노력을 받아들이고 평화 안정 분위기를 조성하며 단계적으로 보조를 맞춘다면 한반도 비핵화 문제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역설했다. /뉴스

전북도, 노인일자리사업 발대식·안전교육 실시

전북도는 28일, 도청 공민장에서 도내 어르신들에게 다양한 일자리 창출로 경제적 도움과 사회적 참여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2018년 전라북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사)대한노인회 전북취업지원센터의 노인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어르신 600여명과 박철웅 전북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 김두봉 대한노인회 전라북도 연합회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의 각오를 다지고, 참여자의 업무현장에서의 안전사고 예방 능력을 높이기 위한 '응급처치 및 교통신호교육' 순으로 3시간 30분에 걸쳐 진행됐다.

도는 올해 노인일자리 확충을 위해 813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만19,900명의 어르신에게 110개 수행기관에서 연말까지 노인들에 적합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발대식을 기점으로 어르신들은 독거노인 안부확인 및 초등학교 급식 도우미, 공공시설 봉사 등 경륜 전수 활동, 식품제조 판매 등 다양한 일자리에 참여하게 된다.

박철웅 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어르신들의 특성과 수요에 맞는 양질의 더 많은 노인일자리 확보해, 사회의 일원으로서 활동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전북연구개발특구 평가, 전국 '1위'

국가 인정 최고 특구되다

전북연구개발특구가 출범 2년여 만에 전국 최고의 특구로 발돋움했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3월까지 전국 5개의 특구에 대한 2017년 실적 평가를 한 결과 전북특구가 최고 등급을 받아 1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이번 성과평가 결과를 통해 전북특구는 내년도 특구 예산 배정에 있어 과기부로부터 연간 100억원 정도의 특구육성 사업비와는 별도로 약 30억원 규모의 인센티브를 추가로 지원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특구 정책의 취지인 연구개발 촉진과 상호협력력을 활성화

하고 특구 내실화 및 관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혁신창출, 특구발전, 지역기여도를 종합평가했다.

평가 결과 전북특구는 2년 밖에 안된 신설특구지만 전체적인 성과가 두드러지며, 특히 특구 발전을 위한 지자체의 지원과 노력, 특구 펀드 조성 및 투자 활성화 등 전체적인 분야에서 골고루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송하진 도지사는 “전북연구개발특구의 현재 성과는, 신생 특구인 만큼 도정 모든 역량을 결집해 조기 성과창출을 위해 노력해 온 결과”라며 “앞으로 농생명융합 융복합 첨단소재 기반 국내 최고 명품 특구이자 세계일류 허브로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진성 기자

익산시, 미세먼지 저감 '총력'

취약계층에게 마스크 보급

공기알리미 인구밀집지역 설치

익산시가 지역 맞춤형 종합대책 마련으로 미세먼지 저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시는 미세먼지가 연일 전국을 뒤덮고 있는 가운데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에 따른 응급대책으로 어린이, 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미세먼지 마스크를 보급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익산시가 7세 이하 어린이 1만3천명, 65세 이상 노인 5만18천명 등 총 7만 1천명에 대하여 21만개의 미세먼지 마스크를 금년 4월중으로 지급한다. 이번에 지원하는 미세먼지 마스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인증한 KF-80으로 0.601μm크기의 미세먼지입자를 80%이상 걸러낼 수 있어 호흡기 질환 불안감을 해소하고 건강피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익산시는 미세먼지 발생량의 약 40%를 차지하는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에 주력하고 있으며, 올해도 어린이통학차량의 LPG차 전환지원(35대), 건설기계 배출가스 저감장치 관련 지원 사업(250대)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미세먼지 고농도기인 3~6월, 11~12월 중 차량 통행량이 많은 주요 도로에 도로변 미세먼지 부유억제를

위한 살수차 및 노면흡입 청소차량 6대를 집중 운행하고, 천연가스 시내버스 확대보급(21대)과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지원(200대), 전기자동차 및 전기이륜차 구입지원(70대)을 통해 온실가스 및 대기오염 물질을 감소시켜 나갈 계획이다.

현재 도로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낮 시간 유동인구가 많은 도심이나 거리에 습식노면분진청소차량 1대, 분진흡입차량 5대, 살수 차량 5대를 투입해 도로에서 재비산되는 미세먼지 청소를 실시하고 있다.

또, 생활 주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공기알리미'를 인구밀집지역과 다중이용시설 10개소에 설치하여, 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체육시설 운동장 캐노피 둘레에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여 시민들 스스로 외부활동을 자제할 수 있도록 시각적인 매체를 활용할 계획이다.

최양호 복지환경국장장은 “국외에서 유입되는 미세먼지를 줄이는 것은 단시간에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어, 우선적으로 미세먼지에 취약한 어린이와 노인의 건강보호를 위해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을 결정하였다”고 말하며 “시 차원에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미세먼지 고농도에도 시민 편의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가능한 조치는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익산=장양원 기자

‘박근혜정부 세월호 해명’ 모두 거짓... 국민들은 4년간 속았다

지난 2014년 4월16일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청와대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책임론을 무마하기 위해 보고 및 지시 시도를 조작하는 등 치밀하게 은폐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청와대는 마지막으로 탑승객을 구조할 수 있는 시간인 ‘골든타임’을 당일 오전 10시17분으로 정해놓고 그 이전에 박 전 대통령의 보고와 지시가 있었다고 꾸미는 등 국민들을 상대로 거짓말을 서슴지 않았다.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난 청와대의 거짓말은 크게 4가지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전 정부 시절 청와대는 세월호 사고 당일 박 전 대통령이 국가안보실로부터 최초로 서면 보고를 받은 시간이 오전 10시라고 밝혔다.

그 뒤 박 전 대통령이 오전 10시15분에 당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인명구조 지시를 내렸고 7분 뒤인 오전 10시22분에 다시 전화해 철저히 구조하라는 추가 지시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결과는 달랐다. 박 전 대통령이 처음 서면보고를 받은 시간은 상황보고서가 관저에 도착한 시간인 오전 10시19분~20분 이후로 파악되며, 이때는 세월호가 이미 좌현으로 108도로 기울어 전복돼 구조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박 전 대통령이 김 실장에게 처음 전화를 걸었던 시간도 오전 10

시22분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위기관리센터는 오전 9시19분께 언론사 TV 속보를 통해 세월호 사고 발생을 처음 알게됐고 이후 선박 이름과 승선 인원, 구조세력 동원 현황과 구조 인원수 등을 파악해 오전 9시57분께 상황보고서 1보 초안을 만들었다.

뒤이어 김 실장은 오전 10시 이후 사무실에서 보고서 초안을 전달 받고 당시 신인호 위기관리센터장에게 전화 보고를 받았다.

김 실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휴대전화로 세월호 상황을 보고하려 했지만 연락이 전혀 닿지 않았다. 당일 박 전 대통령은 집무실이 아닌 관저에 머무르고 있었다. 그러자 김 실장은 안봉근 제2부속비서관에게 전화해 “대통령이 전화를 받지 않으니 보고될 수 있게 조치해달라”고 말하고, 신 센터장에게는 상황보고서 1보를 관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신 센터장은 오전 10시12분~13분께 상황보고서 1보를 완성해 전령 업무를 하는 상황병에게 관저에 전달하도록 했다. 상황병은 위기관리센터 상황실에서 관저 인수문과

지 뛰어가 10시19분~20분께 관저 경호관을 통해 내실 근무자에게 보고서를 전달했다. 내실 근무자인 김모(71·여)씨는 이를 박 전 대통령에게 따로 말하지는 않고 침실 앞 탁자 위에 올려뒀다.

이 무렵 안 비서관은 오전 10시12분께 이영선 행정관의 차를 타고 관저로 갔고 10시20분께 내실로 들어가 침실 앞에서 수차례 박

차 오전 10시 보고 아닌 10시20분 이후 전달 김장수 오전 10시15분 전화 → 22분에 통화 11차례 ‘실시간’ 보고 아니라 ‘일괄 출력’ 전달 당일 외부인 방문 없더니 최순실과 ‘회동’

전 대통령을 불렀다.

이 소리에 박 전 대통령은 침실 밖으로 나왔고 안 비서관으로부터 “김 실장이 급한 통화를 원한다”는 얘기를 듣고 오전 10시22분께 김 실장에게 전화를 걸어 “단 한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 “객실, 엔진실 등을 철저히 수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김 실장은 부하 직원에게 박 전 대통령 지시를 해경 등 관계부처에 전파하라고 했고 오전 10시25분~26분께야 해경 상황실

에 전달됐다.

이 같은 일련의 상황으로 김 실장과 신 센터장 등은 박 전 대통령의 세월호 보고와 지시가 뒤늦었던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국회 운영위원회와 국정조사특별위원회 등의 추궁과 비난을 피하고자 시간을 조작했다.

이들은 세월호에서 마지막으로 카카오톡이 전송된 오전 10시17분을 골든타임으로 잡고 그 이전에 보고와 지시가 이뤄진 것으로 실무자들에게 세월호 사고 상황일지 등 청와대 초치내역 문서와 국회 답변서 등을 허위로 작성·보고하도록 했다.

윤정주 행정관 등도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사건에 증인으로 나와 “박 전 대통령이 9시에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해드렸다”는 취지로 거짓 증언을 하기도 했다. 또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 비서실(정무수석실)로부터 20~30분 간격으로 11회에 걸쳐 실시간 서면 보고를 받았다는 것도 거짓으로 밝혀졌다.

대통령비서실에서 당시 정호성 1부속비서관에게 세월호 침몰 사고 상황 보고서를 이메일로 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박 전 대통령

에게는 그 즉시 전달되지 않았다.

정 비서관은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기에 오전 10시36분부터 시작해 오전 10시57분, 11시28분, 낮 12시15분, 12시33분, 1시17분, 3시30분, 5시11분, 8시6분, 8시50분, 10시19분께 올라온 보고서를 오후 및 저녁시간에 각 1회씩 한꺼번에 출력해 전달했다.

하지만 김기춘 대통령 비서실장 등은 박 전 대통령에게 실시간 보고가 됐는지 등을 확인하지 않고 정 비서관에게 보고서를 보낸 것을 박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치부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경호상 문제” 등을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관저에 있었던 사실을 숨기고 실시간 보고가 이뤄진 것처럼 답변했다.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 사고 당일 간호교과와 미용사 등이 관저에 방문했다는 각종 의혹 제기에 외부인은 없었다고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당일 최순실씨가 오후 2시15분께 이 행정관이 운전하는 차를 타고 ‘A급 보안순님’으로 남몰래 관저를 방문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씨의 정 비서관, 안 비서관 등이 박 전 대통령과 함께 회의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문을 결정한 후에는 전담 미용사인 정송주·정매주 자매를 급하게 청와대로 불러들였다. /뉴스